

- 「국민연금 및 기업연금 등에 의한 노년기 소득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」(연금확보 지원법안, 2010년)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가능 기한(후납기한)을 2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
  - \* 동 법안은 제176회 임시국회에서 일부 수정되어 중의원에서 가결, 참의원에서 심의 중(2012년 현재)
- 2012년 2월 10일에는 「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」은 국채발행으로 수입금을 충당하여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50%로 하고, 연금액의 특례 수준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함.
  - \* 연금액의 특례수준 해소(연금액의 인하)는 2013년 10월부터 실시되며 3년에 걸쳐서 2013년 10월에 1%, 2014년 4월에 1%, 2015년 4월에 0.5%로 총 2.5%를 인하할 예정임.<sup>17)</sup>

- 둘째, 무연금자의 경우 연금수급 자격으로 간주되는 가입기간을 기존의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가입을 독려하고, 저연금자의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고령자를 우선으로 연금액을 가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임.<sup>18)</sup>
  - 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나, 생활고 등으로 인해 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무연금 및 저연금자가 되는 경우가 있음.
  - 또한 무연금자라 하여도 이 중에는 10년,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무연금자가 된 경우도 있는 바, 이는 연금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 아니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 때문임.
    - \* 실제로 65세 이상 무연금자의 약 40% 이상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가능한 가입 기간을 기존의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,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한 급부에 연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검토중임(2011년 12월 기준).

17) 東京新聞, “特例水準の解消(No.444) 年金額は段階的に引き下げ”, 2013.03.27.

18) 藤野優子 NHK, スタジオパーク 「どうなる無年金・低年金対策」, 2011.12.21.